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목포시내버스 '1년간 휴업 신청' “밀빠진 독 물붓기식 재정 지원 안돼”

“태원여객·유진운수 적자 경영 및 경영상황 엄정 진단”

새로운 대안으로 ‘버스공영제’ 제안...시민 서명운동 돌입

목포시내버스의 '1년간 휴업 신청'과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도 휴업신청 철회와 버스공영제 도입,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진단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적자경영 및 경영상황에 대한 뚜렷하고 엄정한 검증과 경영진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은 물론 목포시민사회 소통과연대에서 제안한 가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를 선언했다.

목포시의회 차원의 폭넓은 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 노동자 현안 청취, 투

명한 검증을 위한 의회의 조사방안 강구, 독점구조개선을 위한 추가 면허허가 방안 검토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시민을 볼모로 한 버스 운영 중단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휴업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목포시의회도 11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지역을 외면한 파업과 휴업이 아닌 경영 건전화”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시민의 발 역할을 했지만, 목포시민이 있었기에 회사가 존재했고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내버스 휴업 신청에 대해 가장 먼

저 반대 입장을 보인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더이상 밀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 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새로운 대안으로 ‘버스공영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목포시내버스 공영제 실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돌입에 들어갔다.

목포 시내버스에 지난 2001년 시작된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2020년도부터 80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100억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게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의 주장이다.

지난달 27일 목포시에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휴업을 신청한 목포시내버스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등 두 회사지만 사실상 한 회사이다.

대표는 현재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향토기업이지만 재정적자를 이유로 갑자기 휴업을 신청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진상조사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송선태 위원장(가운데)이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종철 부위원장, 송 위원장, 이종협 상임위원.

5·18 계엄군 “지나가는 신혼부부 쏘다” 증언

조사위, 성과보고회 열고 진행 상황 전해 “고속도로·국도 최소 13차례 차량피격” “총격 사망 4세 아이 암매장 가해자 특정” “계엄군 기관총·저격수 투입” 진술 확보

41년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4세 어린이를 총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광주 봉쇄’를 위해 민간인들을 수십차례 사살했다는 당시 장병 또는 사병들의 증언도 다수 확보됐다고 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법정과제의 조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본격 조사에 착수한 조사위는 그간 두 차례 활동 보고서를 낸 적이 있지만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군이 광주봉쇄를 위해 광주교도소 인근 시위대와 고속도로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조사위는 “계엄군 증언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위는 “광주교도소 양쪽 광주·순천 간 고속도로와 광주·담양 간 국도를 오가는 차량, 민간인에 대해 최소 13차례 차량피격 사건이 있었음을 증언과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며 “교도소 옆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던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사살했다는 복수의 장·사병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남마을과 지원동 일대에서도 그동안 알려진 마이크로버스와 구급차 피격 사건 외에 또 다른 승용차와 구급차 등 최소 5대

차량을 피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증언들을 토대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1980년 5월21일 이후 광주봉쇄작전 시행 중 송암동 일원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오인사격과 민간인 학살의 실상도 확인 중이다. 당시 송암동 일원에는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제20사단, 전투교육사령부 병력 등이 관여했다고 한다.

특히 조사위는 “만 4세 어린이가 총격에 의한 좌후경부맹관총상을 입고 사망한 후 암매장한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했다”며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아동은 현재 국립묘지에 무명·무연고로 잠들어 있으며, 조사위는 유전자(DNA) 대조 등을 통해 신원 파악을 진행 중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송암동 오인사격이 있고 보복살해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세 청년이 죽고 하수구로 도망갔던 여인이 사살당했던 것 등은 다 보도됐지만, 그때 보리밭 너머에서 높고있던 서너명의 어린이에 대한 사격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M60 기관총을 사격하고, 조준경을 부착한 M1소총 저격수가 투입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다수의 진술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3공수여단은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감시탑 및 건물 옥상에 M60 기관총 등을 설치했고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11공수여단은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후 급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했고,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진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서 80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당국 “인과성 조사중”

2차 접종 직후 2분만에 중증 전신 알레르기...병원 이송 뒤 숨져

광주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직후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난 80대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2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3분께 A(81·여)씨가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이상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접종 2분여 만에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다. 곧바로 의식과 호흡을 잃자, 접종센터 내 대기 중이던 현장 의료진이 에피네프

린을 주사하고 심폐소생술을 펼쳤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10시51분께 숨졌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화이자 접종 후 관찰대기 하던 중 흔히 말하는 ‘쇼크’ 상태에 빠진 이후 응급처치 했지만 사망한 케이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단 방역 당국은 예전 과정에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인과성 부분은 부검이나 나머지



조사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라며 “현재 광주시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어떤 사례 인지는 부검과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